

2017년 3월 31일

한일외교 관계 개선될까?

이원덕(국민대학교)

차례

1. 동북아질서 재편 속의 한일관계
2. 한일관계를 이완시키는 구조적 배경
3.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결과
4. 위안부 합의(2015.12.28)는 한일관계 복원의 모멘텀
5. 한일관계의 재 악화와 정상화로의 길
6.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

1. 동북아질서 재편 속의 한일관계

[1965년 이래 한일관계]

- 가치와 규범의 공유, 발전 vs 과거사, 독도문제 마찰과 대립
- 비대칭적 수직적 관계 → 대칭적 수평적 관계
- 2010년대 이후 한일관계의 급속한 악화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

: 미중 양강 구도 속 한국과 일본]

- **일본** : 상대적 힘의 저하 / 미일동맹 강화, 대중 견제 안보정책
- **한국** : 미중 경쟁에 민감, 북한의 대남 도발에 직면
- 21세기 한일관계는 미중 양강 구도에 끼인 양국관계: 역사갈등 극복하여 평화 번영의 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주역이 되어야.

동북아 각국 GDP와 국방관계 비교(2014)

구분	GDP (억 달러)	국방비 (억 달러)	GDP/국방비 (%)	병력 (천명)	국방비/인구 (달러)
한국	12,600	305	2.42	630	596
미국	162,000	6,004	3.70	1,492	1,896
중국	90,200	1,122	1.24	2,333	83
일본	51,500	510	0.99	247	401
러시아	22,100	682	3.08	845	478

미래 미 중 일 GDP 추세 전망

구분/년도	2016	2020	2025
미국	18조 5581억	20조 2433억	22조 5689억
중국	11조 3830억	14조 6436억	20조 627억
일본	4조 4126억	5조 3634억	6조 8449억

미래 국방예산 추세 전망: 단위 (억 달러)

구분/년도	2017	2021	2025
미국	6010	6504	7039
중국	1928	2621	3564
일본	510	560	680

I. 동북아질서 재편 속의 한일관계

1. 한일수교(1965년) 이후 50년사의 조망

1시기

- 1965 ~ 1989
- 냉전 체제 하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반공연대**

2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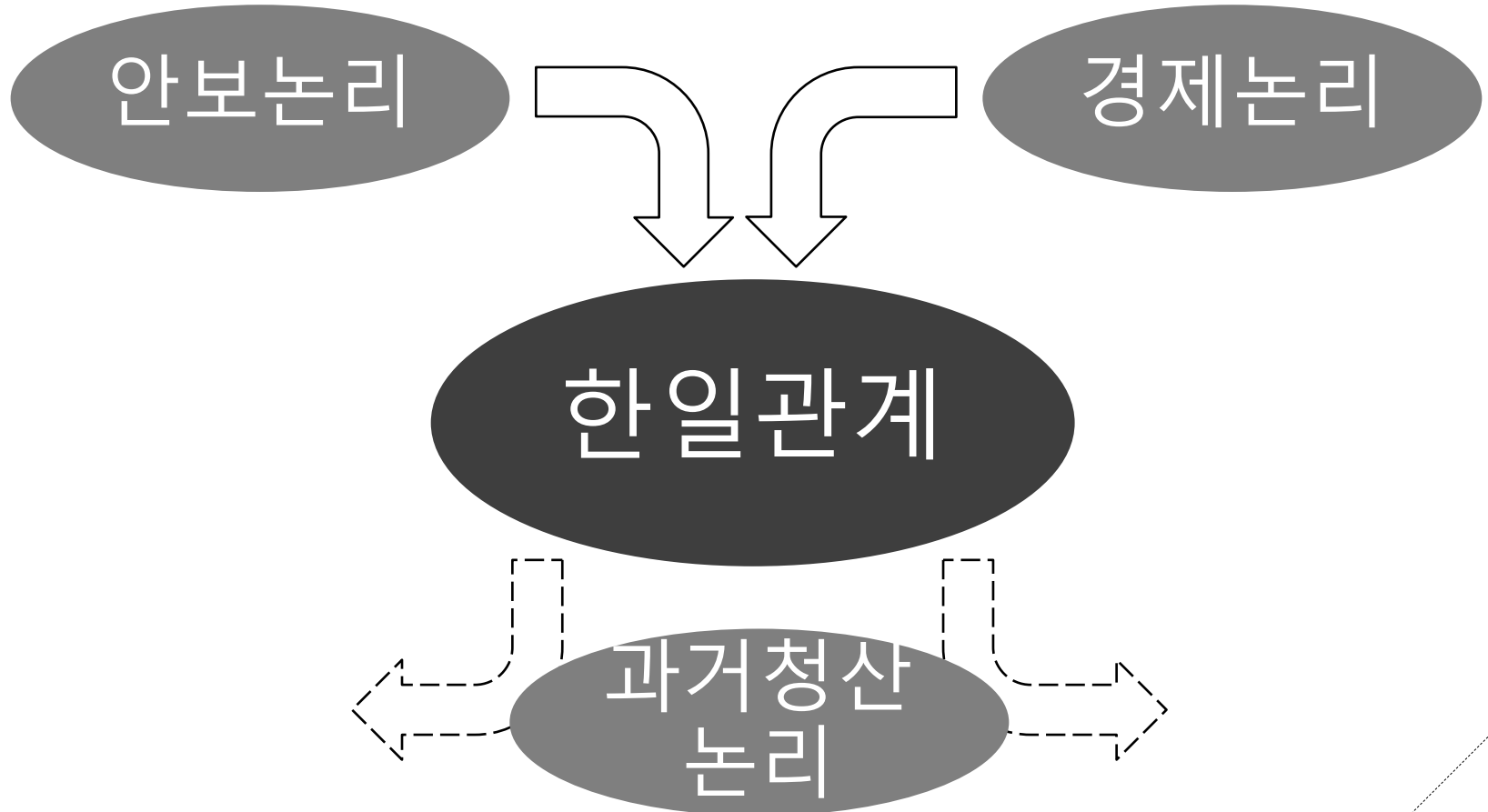
- 1990 이후
- 반공 결속력 이완
- **한일 간 역사-영토 문제 부상**

3시기

- 2010 이후
- 중국의 부상
- 한일관계의 변화 (수직→수평)
- 민주주의·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
- **한일관계 변화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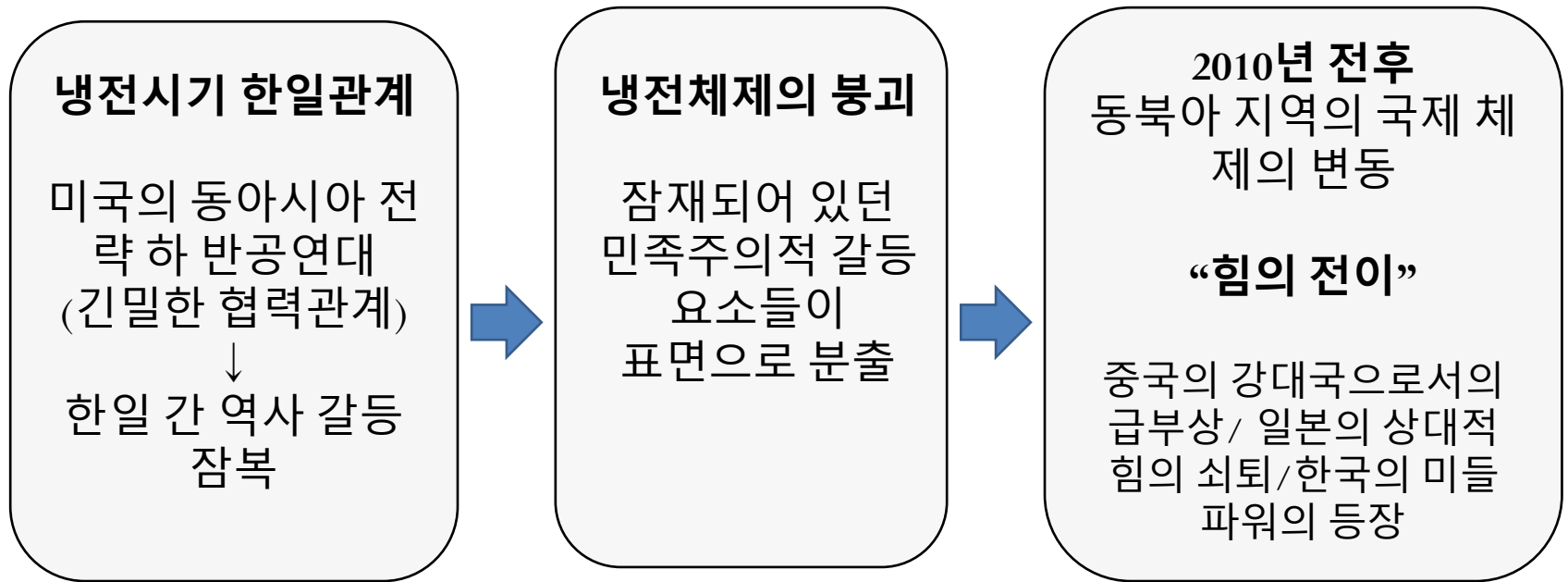
1. 동북아질서 재편 속의 한일관계

2. 냉전시기 한일관계의 구심력과 원심력



2. 한일관계를 이완시키는 구조적 배경

① 냉전종결에 따른 한일관계의 갈등 요소 증폭



▶ 2012년 이후 격심한 한일·중일 간 대립과 마찰은, 동북아지역의 세력전이 현상과 한중일 각국의 정권교체의 동시진행에서 그 구조적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2. 한일관계를 이완시키는 구조적 배경

② 한일 간 정치인, 경제인의 인적 채널 및 네트워크의 급격한 변화

- 1965년 국교수립 후 한일 정치인 간 수많은 공식·비공식적 채널의 회합과 긴밀한 의견교환을 통해 민감한 정치, 갈등 현안을 막후에서 조정, 타협되었음 → 2000년대 이후 의미를 상실
- ‘특수한 한일관계’가 아닌 ‘보통의 이국 관계로의 한일 관계’로 변화 속에서 갈등을 수습하고 완화시켜 줄 정치적 메커니즘의 비 작동
- 반면, 시민사회, 지방자치체, 기업 차원의 교류는 증가

2. 한일관계를 이완시키는 구조적 배경

③ 한일 관계: 수직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의 이동

1960년대 이래
한국의 경제성장

1980년대 후반 이래
한국의 정치사회적
민주화 달성

1990년대
한국의 OECD가입

-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당당한 외교 요구 목소리 강화
-> **대일 자세의 큰 변화로 이어짐.**
-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 역시 국민의 대일감정을 활용한 강경 대일정책 추진.
 - 한국 젊은 세대 :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강렬한 민족주의적 정서 표출과 대일정책에 있어서의 강경 여론 주도.

2. 한일관계를 이완시키는 구조적 배경

④ 일본 국내적 요인

- 1990년대 후반 이후 보수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는 일본의 정치적 지형.
- 과거 역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일반적으로 과거 식민통치와 침략역사에 대한 속죄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은 전후 세대로의 세대교체
- 이러한 경향은 2012년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정점에 달함.
- 일본의 보수 우경화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했던 진보-리버럴 세력은 고령화·약체화되었고, 야당은 지리멸렬함.
- 아베 <1강 다약 체제>의 지속: 2021년까지(?)

3-1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

원인

한일 양국 지도층 간의 소통 부재와
양국의 미디어 보도를 경유하여 나타난
국민 레벨의 극단적인 상호인식의 확산



**단순화된 인식론
전략적 관점이 경시**

3-1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

▶ 한국의 일본인식

‘아베가 이끄는 일본의 우경화’

- 한국 미디어의 아베 본인의 발언이나 행보에 대한 보도
- 대일인식에서의 편견과 선입견
- 지나친 단순화, 우경화라는 단일 프레임만으로 일본을 보는 시선
- 아베의 국가전략: 강한 국가 일본의 회복, 헌법개정, 군사적 보통국가, 정체성의 정치, 지구의를 조감하는 전략외교(중국포위망), 아베노믹스와 자유무역

▶ 일본의 한국인식

사죄피로 현상과 중국경사론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 천황 사죄 발언, 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판결, 2012년 대법원 판결 등
- 한국의 성장으로 인한 인식 부적응 상태
- 한국의 대중 접근을 중국 경사론으로 이해(사드 한중 갈등으로 상당히 완화되고 있음)

3-2 한일관계 악화의 결과

[외교]

- 국제사회에서 약점을 잡는 이전투구
- 반일과 혐한 상승작용
- 대미외교 협력보다는 경쟁 ?

[경제]

- 직접투자, 교역의 축소
- 재일 한국인 민생에의 악영향
- 관광, 교육, 문화 및 인적 교류 위축: 400만 대 170만 (2015)에서 500만 대 230만(2016)으로 개선

[통일]

- 통일과정과 통일 후 일본의 역할을 전략적 고려해야
- 통일 비용과 대북 청구권 자금의 활용 가능성
-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통일과 일본 변수

4. 위안부 합의는 한일관계 복원의 모멘텀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의 본질]

- 역사적 사실 인정, 책임 인정,
- 사죄반성 표명,
- 정부예산으로 사실상의 배상조치

(소녀상 문제와 불가역성의 범위 논란 ← 부수적인 사항, 우익세력의 낭설)

[성과]

- 역사수정주의적 태도를 견지했던 아베 정권 하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한계]

-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과의 소통의 부족 문제

4. 위안부 합의는 한일관계 복원의 모멘텀

[‘불가역성’]

- 한일 정부의 상호신뢰 부족의 소산
- 한국 ▶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망언
- 일본 ▶ 소위 ‘골대 변경론’이라 부르는, 한국에 대한 불신 여론을 의식

[‘최종적 해결’]

- 외교 의제나 쟁점으로서 ‘최종적 해결’
- 피해자의 소송행위, 지원단체나 시민사회에서의 진상규명 활동, 연구, 기념사업, 운동에 하등의 제약 없음

5. 한일관계 재 악화와 정상화로의 길

[한일관계 재 악화 원인]

- ① 부산 총영사관 담벼락 앞 소녀상 건립
- ② 일 측의 보복 조치: 대사소환, 통화 스와프 논의중단 등 초 강수
- ③ 한국의 탄핵-대선 국면: 위안부 합의파기론, 무효론, 재 협상론 부상
- ④ 정상화를 위한 과제: 소녀상 문제 처리 노력, 보복 조치 즉시 철회

[새 정부의 대일외교의 바람직한 방향]

- ① 위안부 합의 파기보다는 검증 작업 후 개선, 보완책 강구
- ② 올바른 해석: 위안부 합의는 사죄합의, 합의 정신의 존중
- ③ 분리외교, 투 트랙 외교, 과거사 문제는 블랙홀, 매몰 되어선 안돼
- ④ 경제-상호이익의 확대 / 대북 안보-협력공조 / 사회문화-교류확대
- ⑤ 정체성-과거사 문제 - 화해를 향한 꾸준하고 장기적인 노력

6.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

냉전 하 유럽의 독불 관계/독
폴란드 관계의 교훈

기본적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의 추구

동아시아
평화 번영과
한일관계

네트워크적인 세계정치 시각:
한일협력을 양국,한반도차원,
동아시아차원,글로벌영역에
걸쳐서 조망

협력 이슈와 주체의 확대 :
문화, 환경, 정보지식, 과학기
술 /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
방자치체 등

Q&A